

충남리포트 제91호

ChungNam Report

2013. 11. 21

CONTENTS

< 요약 >

1. 문제제기
2.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문제
3.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최근 동향
4. 수도권 규제완화의 대응방안
5. 결론

수도권 규제완화와 대응방안 모색

이관률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krlee@cdi.re.kr

본 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의 실태를 진단하고, 그간 수도권 규제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요 약

- 최근 17년간 수도권 집중은 여전히 확대·심화되었고, 특히 자본과 권력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고, 복지분야 등 새로운 수도권 집중이 나타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정책 기조 속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는 추진되었고, 최근에는 공장입지 뿐만 아니라, 대학, 금융, 공공시설로 규제완화의 내용이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제18대와 제19대에서 총 5건의 입법 발의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등 향후 의원입법을 통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런 측면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네트워크 형성이 매우 중요하고,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 모색이 요구됨.
- 우선 수도권 규제정책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우선 규제대상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으로, 규제방식이 입지 규제 등의 직접규제에서 세금 등의 간접규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관계가 형성되어야 함.
-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 이전에 지방의 자생적 기반 확보가 전제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지방재정력 강화, 수도권과 지방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의 균형 확보, 지방의 자립적 경제기반 확충, 지역인재할당제 및 지역인재 채용 장려제 도입, 지방금융 활성화 및 벤처캐피탈 조성, 지방 대학의 수도권 이전 제한, 사회복지 수혜대상에 지방의 저가 주택소유자 포함, 수도권의 정치적 의사결정권 집중 방지를 위한 지역할당상원제 도입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수도권 규제완화와 대응방안 모색

이관률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krlee@cdi.re.kr)

요 약

본 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의 실태를 진단하고, 그간 수도권 규제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최근 17년간 수도권 집중은 여전히 확대·심화되었고, 특히 자본과 권력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고, 복지분야 등 새로운 수도권 집중이 나타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정책 기조 속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는 추진되었고, 최근에는 공장 입지 만이 아니라, 대학, 금융, 공공시설로 규제완화의 내용이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제18대와 제19대에서 총 5건의 입법 발의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등 향후 의원입법을 통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런 측면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네트워크 형성이 매우 중요하고,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 모색이 요구됨.
- 우선 수도권 규제정책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우선 규제대상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으로, 규제방식이 입지규제 등의 직접규제에서 세금 등의 간접규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관계가 형성되어야 함.
-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 이전에 지방의 자생적 기반 확보가 전제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지방재정력 강화, 수도권과 지방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의 균형 확보, 지방의 자립적 경제기반 확충, 지역인재할당제 및 지역인재 채용장려제 도입, 지방금융 활성화 및 벤처캐피탈 조성,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제한, 사회복지 수혜대상에 지방의 저가 주택소유자 포함, 수도권의 정치적 의사결정권 집중 방지를 위한 지역할당상원제 도입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세계 각국의 보고서(OECD, 2001 등)는 우리나라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수도권 집중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49.4%가 거주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과밀한 수도권 집중 현상임.
 - 수도권 집중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영국 런던(12.4%), 일본 동경(27.0%), 프랑스 파리(18.1)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매우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인식하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음.
 -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 집주의 문제를 인식하고, 1982년 수립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부터 수도권 집중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였음.
 - 그 이후 1984년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수도권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를 추진해 왔음.
- 지난 30년간의 수도권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은 확대·심화되었음. 그 이유는 다음의 2가지에서 찾을 수 있음.
 - 수도권 규제정책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없고, 지금까지의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하였다는 측면
 -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정책은 형식적으로 추진되었고, 실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측면

● 한편 수도권 집중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2가지로 양분되어 있음.

- 수도권 규제 찬성: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시각
- 수도권 규제 반대: 수도권 집중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

〈표 1〉 수도권 규제에 관한 2가지 입장

수도권 규제 찬성 입장	수도권 규제 반대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집중으로 소득격차 발생(김익준, 1992) · 과밀혼잡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환경비용 증대, 수도권의 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박용규, 2004) · 지방의 자생적 발전잠재력 붕괴(박양호 외, 2003; 황희연 외,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양금승, 2008; 서승환 2001; 서승환 2008) · 수도권에 대한 기업체 투자수요가 더 많음(송재현, 2008) ·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산업공동화 방지(김장우, 2008)

자료: 이관률외(2011), “수도권 집중과 지역격차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회, 제15권 제1호에서 발췌 재정리.

●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인식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수도권 집중은 더욱 강화되었음.

- 그러나 수도권 규제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한 것인가 아니면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이견이 있음.
- 또한, 수도권 규제정책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2가지 논리가 충돌하고 있음.

● 한편 최근 경제 불황과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제기되고 있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쇠퇴하고 있음.

- 실제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추진한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가 대폭 이루어졌음.
- 또한, 기존의 형식적으로 유지되었던 국가균형발전의 정책기조도 최근에는 쇠퇴함에 따라 수도권 규제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

● 따라서 본 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의 실태를 진단하고, 그간 수도권 규제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문제◀

02

-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를 의미하고, 수도권 집중은 전국에서 차지하는 수도권의 비중($\frac{\text{서울} + \text{인천} + \text{경기}}{\text{전국}}$) 혹은 수도권의 평균 값에서 지방의 평균 값 차이($\text{mean}(\text{서울, 인천, 경기}) - \text{mean}(\text{그외 시도})$)를 의미함.
- 고급노동력의 유입에 따른 지속적인 수도권의 인구집중
 - 2012년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49.44%로 이는 1995년의 44.15%에 비해서 5.29% 상승한 것임.
 - 동 기간 중 수도권의 출생률 감소(1.71%→1.24%), 수도권의 취업자 중 대졸의 비율 급속한 상승(21.07%→44.92%)을 고려할 때,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지방의 고급노동력의 이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경제활동과 자본의 집중은 인구집중 보다 더 심각한 수준
 - 2011년 현재 수도권의 GRDP 비중은 47.19%, 기업체수는 47.33%, 제조업체수는 50.79%임. 그리고 2012년 현재 은행예금의 71.07%와 은행대출의 68.3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 1995년과 비교할 때, 경제 및 자본의 수도권의 집중도는 제조업체수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하였고, 특히 자본의 수도권 집중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 및 공원 등 새로운 복지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 발생
 - 2012년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64.37%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고, 공원면적의 39.1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 지난 1995년과 비교할 때, 사회복지시설의 수도권 집중도는 34.62%가 증가한 것이고, 공원면적은 8.68%가 증가한 것임. 기초생활인프라는 수도권과 지방이 균등해지고 있지만, 새로운 사회수요에서는 더욱 격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표 2〉 수도권 집중도의 실태와 변화

구분			수도권 집중도		변화률 (2012~1995)
			1995	2012	
인구	인구	명	44.15	49.44	5.29
	출생률	%	0.26	-0.19	-0.45
	취업자 중 대졸 비율	%	3.97	6.67	2.70
경제	GRDP*	백만 원	45.13	47.19	2.07
	기업체수*	개소	43.72	47.34	3.62
	제조업체수*	개소	55.57	50.79	-4.78
자본	은행예금	10억 원	64.26	71.07	6.81
	은행대출	10억 원	58.94	68.36	9.42
복지 인프라	사회복지시설수	개소	29.74	64.37	34.62
	공원면적	천㎡	30.43	39.11	8.68
미래세대	고등학생수	명	40.16	47.63	7.47
재정 및 권력	재정자립도	%	27.71	37.13	9.43
	국회의원수	명	33.20	45.71	12.51

주: *는 2011년 자료임.

● 미래세대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사회갈등 발생 우려

- 2012년 현재 수도권의 고등학생 비율은 47.63%인데, 이는 1995년과 비교할 때 수도권 집중이 7.47% 증가한 것임.
- 수도권에서 성장하고 있는 미래세대 인구가 많다는 것은 향후 미래세대 간에 사회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음.

● 지방재정력의 격차 및 권력의 수도권 집중의 확대

- 2012년 현재 수도권의 재정자립도는 77.93%인데 반해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40.80%에 불과하고, 이 격차는 1995년에 비해서 9.43% 확대된 것임.
- 한편 수도권의 국회의원 비중은 45.71%인데, 이도 1995년에 비해서 수도권 집중이 12.51% 증가하였음.

〈표 3〉 수도권과 지방의 주요 지표

구분			1995		2012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인구	인구	명	20,693,368	26,174,313	25,132,598	25,702,557
	출생률	%	1.71	1.45	1.24	1.43
	취업자 중 대졸비율	%	21.07	17.10	44.92	38.25
경제	GRDP*	백만 원	195,804,568	238,091,650	585,946,448	655,635,677
	기업체수*	개소	1,234,976	1,589,772	1,642,557	1,827,477
	제조업체수*	개소	53,462	42,740	173,152	167,757
자본	은행예금	10억 원	99,803.40	55,512.30	703,179.00	286,196.00
	은행대출	10억 원	90,494.70	63,046.40	750,739.00	347,456.00
복지 인프라	사회복지시설수	개소	196	463	625	346
	공원면적	천㎡	300,210	686,332	390,849,349	608,582,078
미래 세대	고등학생수	명	886,311	1,320,771	914,473	1,005,614
재정 및 권력	재정자립도	%	76.70	48.99	77.93	40.80
	국회의원수	명	84	169	112	133

주: *는 2011년 자료임.

● 최근 17년간 수도권 집중 현상을 종합해 볼 때, 자본과 권력의 수도권 집중이 강화되고 있고, 복지과 미래세대 등과 같은 새로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나타남.

- 자본, 복지인프라, 미래세대, 그리고 재정 및 권력 분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인구와 경제의 수도권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증가 속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제조업체의 경우 수도권 집중도가 최근 17년간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현재 진행형으로 확대·강화되고 있고, 오히려 자본과 권력에 의해서 더욱 구조화될 개연성을 나타내고 있음.

-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인구와 경제활동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자본과 권력의 수도권 집중, 그리고 새로운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방지가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것임.
- 만약 자본과 권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방치하게 될 경우, 향후 수도권 집중의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종국적으로 시장과 정책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는 고착현상이 발생할 것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최근 동향◀

03

- 1984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립 이후 수도권 규제가 이루어졌지만, 개별법의 개정을 통해서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루어졌음.
 - 과연 그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는가에 대한 본질적 의문을 가질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도 사실임.
- 참여정부 시절에도 부분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루어졌음.
 - 주한미군이전 및 미군공여 지역 등에 대한 수도권 규제 완화(2004): 500㎡ 이상의 공장 신증설, 대학이전 및 신증설 허용, 대학총량규제 배제(이창호, 2013)
 - 자연보전권역 택지규제방식 전환(2006):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지역에 한해 택지개발을 상한규제에서 하한규제(6만㎡ 이상 금지→10만㎡ 이상 금지)로 전환(이창호, 2013)
 - 대학구조개혁 지원 등을 위한 규제 개선(2006): 도시재정비 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서울시 안에서 대학이전 허용, 수도권내 정원감축을 전제로 수도권 전문대학과 지방대학간 통합 허용(이창호, 2013)
 -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탄력성 강화: 공장총량 설정주기(1년→3년)하여 총량제 운영상의 융통성을 강화(이창호, 2013)

● 이명박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2008)” 로 수도권 규제의 전면적 해제 시행

- 당시 수도권 규제 완화의 목적은 있는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있었음.
- 이를 위해 수도권 이용계획 수립방식 개편, 용도지역 제도의 통합 및 단순화, 토지개발 및 이용규제의 합리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산업 및 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였음.

〈표 4〉 이명박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의 주요내용(2008)

구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기타지역	산업단지	산업단지 공업지역	기타지역
단조	직접규제	총량제	연면적 200㎡ 이상					
		대기업	신증설 금지 (기존공장의 경우 3,000㎡ 증설)		신증설 금지	신증설 금지 (기존공장의 경우 3,000㎡ 증설)	신증설 금지	
		중소기업	제한없음	도시형 공장	첨단업종	제한없음	도시형공장 (3,000㎡ 이내)	도시형공장 (1,000㎡ 이내)
		예외조항	첨단업종은 1,000㎡ 이내 신증설		첨단업종: 1,000㎡ 이내 신증설 기존공장은 3,000㎡ 증설		첨단업종 도시형공장 3,000㎡이내	첨단업종 도시형공장 3,000㎡이내
	간접규제		과밀부담금 부담 취등록세 증가					
규제완화	직접규제	총량제	500㎡로 대상 완화 경제자유구역 등 국가정책적으로 개발예정지 총량규제대상 제외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허용	200% 이내	100% 이내	산업단지내 전면 허용 첨단업종 기존 공장의 증설 공업지역내 규모·업종제한 폐지 공업지역외 첨단업종200% 증설 첨단업종의 공장은 기존부지내 증설허용	신설규제 유지 증설 및 이전규제 부분적 완화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간접규제			과밀부담금: 금융중심지내 금융업소, 산업단지 R&D시설에 대해 면제 취등록세 종과제도 개선					

● 이명박 정부에서는 개별법의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행위제한 완화(2009):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관광지조성사업의 면적 제한 규제 완화(이창호, 2013)
- 연구소 등에 대한 과밀부담금 감면(2009): 산업단지, 과학기술단지, 나노기술단지에 건축하는 연구소와 금융중심지에 건축하는 금융업소에 대하여는 과밀부담금 감면(이창호, 2013)
- 그 외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 내의 공장 신증설(2011)과 수도권 입주허용첨단업종 범위의 확대(2011) 등이 이루어졌음.

●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의 정책기조 쇠퇴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의 추진

-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는 과정에서 특별법상 국가균형발전의 정책기조를 유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지방과 분권관련단체로부터 저항을 받았음.
- 박근혜 정부에서도 수도권 자연보전지역 내 4년제 대학 이전 허용(2013), 규제완화-투자활성화대책(2013)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 ※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및 노후산단 리모델링 등은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정책임.

●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고, 공장입지 허용뿐만 아니라 대학, 금융, 공공시설 등으로 규제완화의 영역이 다양화되고 있음.

- 제18대와 제19대 국회에서 총 5건의 입법 발의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고, 향후에도 의원입법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의 내용이 대학, 금융, 공공시설 등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음.

1) 기본전제

- 수도권 집중은 현재도 심각한 수준이고, 향후에도 계속 악화될 것임.
 - 수도권 집중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이고, 그 수준과 내용이 다양화되고 악화될 것임.
- 수도권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그간 수도권 집중은 여전히 진행되어 왔음.
 - 그동안 수도권 규제정책의 실질적인 성과가 매우 미약하였음.
-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와 논리는 더욱 강화될 것임.
 -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적 요구와 논리가 확대될 것임.

2) 수도권 규제정책의 다변화

- 수도권 규제의 대상이 현행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으로 변화되어야 함.
 - 선행연구에 의하면, 기존 제조업의 입지규제만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없음. 예컨대 허재완(2003)의 연구에 의하면, 수도권 집중은 제조업에 의해서 아니라 서비스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따라서 서울시 금융중심지구내 금융업소에 대해서 과밀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방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단적으로 최근 17년간 은행예금과 대출의 수도권 집중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대표적 예로 지적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수도권 규제정책이 지금까지 제조업에 대한 규제였다면 앞으로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방이전 아닌 수도권내 공공법인 사무소의 신·증축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규제정책을 유지해야 할 것임.
-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수도권내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수도권 규제는 입지규제 등의 직접규제 방식과 세금 등의 간접규제방식을 병행 추진

- 현실적으로 수도권내 지가와 입지비용 등을 고려할 때,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대기업이 무제한적으로 입지하는 것은 곤란할 것임. 단적인 예로 전경연에서 2008년 8월 수도권내 투자 의사를 조사하였을 때, 26개사가 투자 의사를 나타냈으나, 실제 규제완화가 발표된 이후 당초대로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를 재표현한 기업체는 불과 7개사에 불과한 실정임. 반면에 12개 기업체는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아 투자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양금승, 2008).
- 따라서 수도권내 제조업체 입지를 시장논리에 의해 조정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수단을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서 과밀억제권역에 부과되었던 과밀부담금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권역별로 부담금을 차별화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임.
-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제조업활동을 규제하던 것을 규모에 관계없이 수도권의 산업구조와 정책방향과 일치하면 허용을 하되, 다만 과밀부담금, 취득세, 법인세 등에 대해서는 중과세하는 간접규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의 상생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검토·시행되어야 함.

-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은 지나친 과밀혼잡을 발생하고 있는 특수문제지역의 성격을 띠고 있음. 그러나 그러한 수도권 또한 자생적 지역발전을 추진해

- 야 하는 하나의 지역임에는 분명함. 그렇기에 지나친 규제로 인해 수도권
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 따라서 수도권의 규제완화는 지방의 상생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가 되
어야 할 것임. 예컨대 수도권이 지역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디지
털 콘텐츠, 정보통신, 바이오, 금융기업지원, 물류, 자동차, 기계금속, 생
명, 문화콘텐츠 등에 있어서 수도권의 자생적 발전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
할 수도 있을 것임.
 - 그러나 지방에서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하는 산업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은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과소화를 촉진하는 비합리적 의
사결정일 수 있음.

3) 지방의 자생기반 확보

●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재정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지방이양이 결정된 1,119개 사무의 즉각적인 지방이양 시행 및 지방이양일
괄법을 통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아울러 사무이
양에 따라 해당 재원도 지방으로 동시에 이양되어야 할 것임.
-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조정, 지방소비세의 확대, 지방법인세 도입, 비주거
용 건물 및 법인세의 국세로 지역균형발전기금의 마련, 광역지역발전특별
회계의 확대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수도권의 지방정부와 유
사한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수도권과 지방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의 균형 확보가 필요함.

- 사회간접자본비의 6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지방광역 및 간선
교통망의 경우 투자효율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음.
- 따라서 사회간접자본 투자비를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48.9대 51.2로
조정하여 지방의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사업타당성분석 시 지역발전 수준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을 차등적으로 적

용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임.

● 지방의 자립적 경제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혁신거점의 육성 및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필요

- 지역의 혁신거점을 구축하고 특화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투자촉진 및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지정되어야 할 것임.
- 지방이전 기업에 도시개발권 부여함과 동시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한해서 5년간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 인센티브가 확충되어야 할 것임. 한편 장기적으로 현행 입지보조금 지원에서 고용보조금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지역인재할당제 및 지역인재 채용장려제가 도입이 요구됨.

- 공무원, 공사 등과 같이 공익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 경우, 해당 지역의 인재 우선 채용을 의무화해야 함. 그리고 로스쿨, 의학전문대학 등에 지방인재할당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아울러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신규 채용 지역인재 임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지방금융 활성화 및 광역자치단체별로 벤처캐피탈이 조성해 지방의 기업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임.

- 금융의 수도권 집중도 더욱 심화되고 있음. 금융의 수도권 집중은 지방의 기업환경을 악화하는 주요 요인임.
- 따라서 지방의 기업환경 개선과 신규 기업신설 촉진을 위해 지방금융 활성화 제도마련과 더불어 광역자치단체별 벤처자본을 조성·지원해야 할 것임.

●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제한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완화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등에 의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음.
-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다만 수도권에 대학이 신설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함.

● 사회복지 수혜대상에 지방의 저가 주택소유자 포함

- 수도권 전세 가격이 지방의 주택 가격에 비해서 높아서 각종 사회복지 대상에서 지방의 주택소유자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사회복지 수혜대상의 선정기준에서 주택 소유 여부 대신 총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아울러 지방의 경우 수혜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 수도권의 정치적 의사결정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 필요

- 현행 인구비례로 국회의원수가 확정됨에 따라 수도권의 국회의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회의원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역할당상원제 도입의 검토 필요

- 기본적으로 성장은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하지 않음.
 - 규모의 경제, 외부성, 집적이익 등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인구, 산업, 자본,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임.
- 수도권 집중과 지역격차는 시장과 정책에 심화·확대되어 왔음.
 - 그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입지적 관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이는 수도권 집중의 이유 중에서 시장메커니즘도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강력한 수도권 규제정책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임.
 - 설사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제고와 분권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이 최소한의 자생력을 가지기 전까지 수도권은 다른 지방에 비해서 특별히 규제되어야 하는 특수지역임.
- 한편 수도권과 지방의 대결적 구조를 탈피하고,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한 논리적 기반 확충 필요
 - 따라서 기존의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한 대상과 수단의 다변화, 그리고 지방의 자생적 기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이 실천전략 마련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수도권과 지방의 이분법적인 대결구조를 깨고, 새로운 균형발전의 담론을 지방이 제시하고 주도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이 관 료 책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041-840-1204, krlee@cdi.re.kr

충남리포트(2008~)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08-01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 기름유출 사고와 지역발전 전략	송두범	2008. 1.21
2008-02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향후 발전 과제	강영주	2008. 2.22
2008-03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이충훈·권영현	2008. 3.19
2008-04	국가적 도시재생연구 추진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	조봉운·송두범	2008. 5. 2
2008-0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내용 및 성공적 구축과제	송두범·강영주	2008. 5.27
2008-06	방위산업의 현황과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방안	이관률	2008. 6.19
2008-07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신동호·강영주	2008. 7.30
2008-08	충남 중소기업의 성장과 변화 분석	백운성	2008. 8.29
2008-09	충남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시·군별 균형발전 평가	원종문·강영주	2008. 9.30
2008-10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발표에 따른 충남의 대응방안	백운성	2008.10.30
2008-1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분석	오용준	2008.11.28
2008-12	생물다양성 국내외 현황 및 확보 방안	정옥식	2008.12.30
2009-01	충남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부품소재 전문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	강영주	2009. 1.30
2009-02	충청남도의 금강 살리기 연계 발전전략	한상욱	2009. 2.24
2009-03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	정종관	2009. 3.11
2009-04	바람직한 금강 하구역 개선을 위한 부분 해수유통 방안	전승수·한상욱	2009. 3.18
2009-05	굴포운하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활용방안	오석민·한상욱	2009. 4.24
2009-06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지역파급효과와 발전전략	이인배	2009. 5. 8
2009-07	충청남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임준홍	2009. 6.29
2009-08	태안군 녹색성장이 육성을 위한 환경생태관광의 여건과 발전전략	이인배	2009. 7.23
2009-09	이야기길 관광자원화 사례로 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와 발전전략	최인호	2009. 8. 6
2009-10	로컬푸드의 실태 및 충남의 실천과제	윤병선·유학열	2009. 9. 7
2009-11	충남 전통시장의 특성과 활성화 전략	임준홍·이상준외	2009. 9.30
2009-12	지역 통계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	조한석·백운성	2009.10.30
2009-13	충남 농수산물 수출실태와 활성화 전략	임형빈·유학열	2009.11. 9
2009-1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반드시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	김용웅	2009.11.18
2009-15	충남지역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이재완·이관률	2009.12.11
2009-16	대전·충남의 금융산업과 지역발전	류덕위·김양중	2009.12.31
2010-01	국가 도시재생 정책에 대응한 충남의 도시재생 전략	임준홍·조수희외	2010. 1.29
2010-02	대전충남지역 4년제 대학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	김동준·김양중	2010. 2.24
2010-03	충남의 지역경제 개관 -사회계정행렬(SAM)을 통한 분석	임재영	2010. 3.10
2010-04	충청남도 사회적 기업 육성전략 II	이용재·임준홍	2010. 3.18
2010-05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II	이충훈·권영현	2010. 4. 5
2010-06	아·태지역 인적자원개발과 충남의 정책적 시사점	최병학	2010. 4.30
2010-07	중국 시장에 대한 충남의 수출경쟁력 분석	김양중	2010. 5.10
2010-08	충남 도시농촌 교류정책의 현황 및 과제	송두범	2010. 5.27
2010-09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	김동준·김양중	2010. 6. 3
2010-10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이 충남 연안역에 미치는 영향	장동호·윤정미	2010. 6.21
2010-11	충남 귀농·귀촌 실태 분석과 과제	유학열	2010. 8. 9
2010-12	충남경제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	신동호	2010. 8.16
2010-13	충남 지역경제 10년과 과제(1998년~2007년)	임재영	2010. 8.19
2010-14	기후변화의 영향과 충남의 대응정책	이인희	2010.10. 6
2010-15	사람중심,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정책과제	조명래·임준홍외	2010.10.29
2010-16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	임준홍·김양중외	2010.11.09
2010-17	충청광역경제권의 산업간 연계구조 분석	임형빈	2010.11.16
2010-18	충남의 저탄소 녹색도시정책과 과제	오용준	2010.12.30
2011-01	경관법 개정에 따른 충남도 및 시·군의 대응방안	한상욱	2011.01.13
2011-02	2011년 충남의 GRDP 전망	김양중·이선희	2011.02.10
2011-03	고령화시대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이충훈	2011.03.31
2011-04	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를 위한 우선보전 연결구간 선정	사공정희	2011.04.21
2011-05	상권활성화제도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	임준홍 외3명	2011.05.02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1-06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이상진 · 김영일	2011.06.23
2011-07	민선 5기 충남도정 1년을 말한다	성태규외	2011.06.30
2011-08	충남 항만 이용 현황과 발전방안	임형빈	2011.07.11
2011-09	박쥐 복원의 필요성과 방안	정옥식	2011.07.27
2011-10	충청남도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 연구	성태규	2011.08.22
2011-11	기업과 지역주민 간 상생 · 협력 방안 연구	김양중	2011.10.31
2011-12	충남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과 기업유치정책의 개선방안	홍성호	2011.11.30
2011-13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정책과 대응방안	이인희	2011.12.29
2012-01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김종수	2012.01.31
2012-02	국내외 농공상 융합기업 지원정책 동향과 시사점	신동호	2012.02.13
2012-03	2012년 충남의 수출입 전망	김양중	2012.02.28
2012-04	2012년 충남 GRDP 전망	김양중	2012.02.28
2012-05	충남 가구 주택 특성과 정책방향	임형빈	2012.03.12
2012-06	충남 사회적경제 정책과 협동조합	송두범 · 김종수	2012.04.02
2012-07	충청남도 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	김영일	2012.05.31
2012-08	충청남도 전원주거단지 정주실태 분석	조영재	2012.06.21
2012-0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충남의 특화산업 분석과 선정	전영노 · 백운성의	2012.08.10
2012-10	충남형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모델	허남혁 · 정준	2012.08.16
2012-11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도시계획	윤정미	2012.09.20
2012-12	농업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공생을 위하여	정옥식	2012.10.31
2012-13	걷고 싶은 거리조성을 통한 도심녹지체계 확보	사공정희	2012.11.28
2012-14	한·중 FTA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김양중	2012.12.12
2013-01	충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 특성분석과 정책수요 도출	홍성호 외	2013.02.21
2013-02	2013년 충남 수출 및 GRDP 전망	김양중	2013.03.07
2013-03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실태조사와 해결과제	송두범 외	2013.04.19
2013-04	에코유지임을 통한 충남 자연환경의 보전 방안	여형범	2013.04.29
2013-05	충남지역 귀농·귀촌 실태 비교 연구	유학열	2013.05.10
2013-06	우리나라 직접지불제 실태 분석을 통한 시사점	강마야 · 여민수	2013.07.10
2013-07	주요 선진국의 농업 직불제 사례	허남혁 외2명	2013.07.18
2013-08	대형마트 의무휴업, 그 후 1년: 일본 상점가정책의 시사점	이민정	2013.08.09
2013-09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 구조분석	이관률	2013.08.23
2013-10	충남의 2040 미래전망 및 시사점 -지역경제분야-	김양중	2013.09.02
2013-11	도 및 시군 풍수해종합계획과 도시계획부문에서의 역할	윤정미	2013.09.16
2013-12	수산분야 충남도민 참여예산제 고찰	김종화	2013.10.24
2013-13	송전선로의 사회경제적 피해와 충남의 대응방안	이인희	2013.11.15
2013-14	유류사고 이후, 태안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수산업 발전방안	김종화	2013.11.18
2013-1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대응방안	백운성	2013.11.19
2013-16	충남 스포츠마케팅 추진방안과 과제	김경태	2013.11.20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